

유휴 도시민으로 농촌인력난 해소한다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진행... 농가에 도시유휴 인력 4만8000명 알선해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질적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 내 유휴인력을 발굴, 알선하며 농가와 도시민들의 상생형 고용지원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전북 농식품 도농(都農)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9월 까지 완주군을 포함한 도내 7개 군에서 약 4만 8천 명의 농촌인력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시 유휴 인력은 2만 명에 달한다.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어 완주, 장수, 무주, 고창, 임실, 진안, 부안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국비 20억원과 도·군비 21억원 등 총 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농식품 일자리 연계 목표인 3만 8천 명을 초과해 9월까지 4만 8천 명의 인력을 알선하며 목표 대비 1만 명을 추가로 달성, 농가와 구직자들로부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전북 농식품 도농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북자치도가 완주군 등 7개 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촌 근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에 로컬 잡(JOB) 센터를 구축하여 영농철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도시민 유휴 인력을 알선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로컬 잡센터의 전담

컨설턴트는 도시 지역을 방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도시민을 발굴해 농가와 매칭시킨다.

구직자에게는 교통비(1일, 8,000원)와 농작업에 필요한 웰컴키트, 상해보험 등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알선받은 구직자의 중식비, 축진수당, 간식비 등을 지원해 구직자 1명당 1일 12,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가는 인력난 해소와 함께 영농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구직자들은 전북자치도의 '농가 일모야 플랫폼'을 통해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아,

안정적이고 편리한 근로 환경을 누리고 있다.

또한, 상용직 알선으로 9월까지 1,300 명이 취업하며 농촌 지역의 고용 서비스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다.

김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도농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로컬 잡센터 전담 인력이 도시 유휴인력을 직접 발굴해 농가에 매칭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민들 사이에서 농촌 일자리 문제는 로컬 잡센터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업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가예산 확보 전문가 간담회

정부 지원 축소에 따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위기 대응책 모색 전북도, 자생력 강화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지원 축소 및 폐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비 사업 발굴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해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역할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역할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역할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을기업으로 지정된 6개 사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2025년에는 추가로 5개소의 취소가 예정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소멸 대응 자금 등 유사한 예산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24년 5개 사업에 7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25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계획인 '제2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미애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발굴 등 정책적 대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통합연합회 10일 출범, 찬성단체 순차적 확대



완주역사박물관추진위와 완주·전주상생통합연합회, 개인택시완주지부는 10일 오전 11시 전주역 옆 초월갈비 세미나실에서 완주·전주통합연합회를 공식 출범했다.

완주지역에 산재한 행정통합 추진단체들이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에 대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주역사박물관추진위와 완주·전주상생통합연합회, 개인택시완주지부는 10일 오전 11시 전주역 옆 초월갈비 세미나실에서 완주·전주통합연합회(공동대표 최진호·나유인·이동진)를 공식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에 앞서 1차적으로 완주군 관내 찬성 희망사회단체 확대 규합과 2차적으로 찬성 활동을 지원할 전주시 관내 찬성단체 확대 연합방안 등 올해 안에 진행될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회는 완주군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통합 반대 활동에 군민의 거부감이 확산되고 오히려 통합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통합의 여망을 진작시키기 위한 전

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차원의 통합 세부공약을 정례적으로 발표하도록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시청사 건립 세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시설물 이전 및 신설 계획안 △완주군에 들어설 통합시 공공기관 신설 계획안 △관공

단지 조성계획안 △중장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인구유입을 촉진시킬 택지개발 계획안 △완주~전주 연결 망을 다질 사회기반시설로서 SOC 사업 로드맵 등이며 △현역시장 설립 금지 계획도 포함된다.

연합회는 출범식에 참여할 전주시

갑·을·병 국회의원들로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방의원들로부터 조례 제·개정과 통합대비 예산 수립 역할을 경청하고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에 대비한 범 도민운동이 동시에 펼쳐지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인구가 백만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이 필수 있게 정치권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설립시키고 통합후에도 자치권 상실없이 지방정치가 지속되고 교육, 복지, 농업예산도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제도화를 통한 완주군민 실득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내년 5월 경, 12년 만에 이뤄질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지방소멸시대를 맞은 전북이 도약, 침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도지사, 전주시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전북도약의 주역이 된다는 심정으로 나서면, 찬성 우호 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인터넷진흥원장에 검찰 수사관 출신 임명은 어불성설"

민중 정동영 의원, 과기부 산하기관 국감서 지적 "전문성과 무관...尹정부 검찰인맥 관리 차원인가"



경우 대응 가능
한지 의문이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에서 "디지털민생사범은 폭증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제자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퇴사자가 급증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디지털개인정보 보호의 수호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개인정보보호의 수호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그런데 태극기부대 성향의 검찰수사관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법치 대신 인치에 의존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맥 관리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에서 "디지털민생사범은 폭증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제자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퇴사자가 급증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디지털개인정보 보호의 수호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에서 "디지털민생사범은 폭증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제자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퇴사자가 급증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디지털개인정보 보호의 수호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디지털 민생범죄는 폭증하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

최근 5년간 스미싱, 악성앱 탐지 및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금년 8월 까지 스미싱은 2023년의 두배, 악성 앱은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예산은 5년 동안 동일하게 574백만 원이다. 앞으로도 스미싱 및 악성앱 탐지가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된 2025년 예산도 동일하게 574백만 원으로 제자리다. 스미싱 및 악성앱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다. 이러한 디지털민생범죄는 향후에도 폭증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관련 예산이 제자리 걸음을 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디지털개인정보보호기관장에 검찰수사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어불성설"

경찰청 퇴직은 4급으로 했지만, 사실상 5급 수사관 출신인 이상중 원장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취임했다. 역대 원장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최소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었는데 반해 검찰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원장 취임은 윤석열 정부의 감쪽 발탁오류밖에 볼 수 없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디지털개인정보보호기관장에 검찰수사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어불성설"

경찰청 퇴직은 4급으로 했지만, 사실상 5급 수사관 출신인 이상중 원장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취임했다. 역대 원장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최소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었는데 반해 검찰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원장 취임은 윤석열 정부의 감쪽 발탁오류밖에 볼 수 없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신속 제압... 인명·재산 피해 막아

전북자치도, 9월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수립·본격추진 효과 거둬 모의훈련 등 현장 중심 예방활동... 실제 사고에서 신속 대처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 소방당국은 그동안 지하 주차장 전기화재 예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것이 지난 9월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화재에서 인명과 추가 재산 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주시 혁신도시 내 한 공동주택의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1

시간 만에 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주관 전담팀을 구성해 9월 관련 부서 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또한, 지난 8월 26일 행정부지사가 직접 이번엔 화재가 발생한 오피스빌

을 방문해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모의훈련을 하는 등 사전 현장점검 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평소 소방관서 및 관계인이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으로 관계인에 의한 빠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주격으로 실시하는 현장대원 협조 훈련으로 선차 소방대가 발화점을 빠르게 찾으면서 큰 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실시된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

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던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화재 발생 및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차량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 지원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옥외 설치 기준 마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검토 및 관리 실태 점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 협조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이용 중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충전시간 미준수, 인화성 물질 적치 등 지하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관리 실태 등을 시군과 함께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21대 총선서 제기된 '무효' 소송 대부분 소취하·기각·각하 처리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중 117건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동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과답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처리된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전,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소송이 남발됐지만 근거 없는 괴담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중앙선거위는 투표 결과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